총장 선출제 갈등, 구성원 의견은?

“빼앗아간 투표비율로 뭘 하시려는지 교수님께 묻습니다”

김수혁	전완주	이희완	안지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서울캠 일반대학원 비대위원	국제캠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민주적 총장 선출제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과정은 조급하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련해야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구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출제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긴 하였으나 8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법인과 구성원이 상호 협의를 통해 총장선출규정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과가 단 일주일 만에 한 단체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학생대표들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우고자 지금까지보다 더 고민하고 소통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평의원회 안에서, 공정의 가면을 쓰고 법이 보장한 과반수의 투표권을 행사하며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특정 단위 앞에 우리 학생대표들은 결단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대표는 불합리한 상황 위에서 진행된 대학평의원회 규정안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의회가 보여주신 규정 제정의 과정은 졸속 진행이었습니다. 우리대학이 숱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당연히 행해 왔던 모든 단체의 뜻을 모으는 일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직선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을 되풀이하며 정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본질을 흐리며 사실을 호도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대표는 타 대학 투표반영 비율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등 여타 많은 대학들이 이미 투표반영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 교수에게 높은 투표반영 비율을 주고 이렇게 진행했으니, 우리 대학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타 대학 투표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높은 투표반영 비율을 가진 타 대학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야기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본 결과만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께 묻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을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를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지,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대표를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투표 비율을 빼앗아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빼앗아간 투표 비율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구도의 선거가 일단 한 번 시행되면 사례로 남아 오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법인, 학교 본부, 교수님, 학생을 포함한 모든 경희 구성원님들께 읍소합니다. 우리 학생대표의 의견만을 무조건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총장 선출제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물이 흘러 결국 바다에 닿듯이 자연스럽게 정수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교수님들께 이제 뭘 배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원 대표 공동 합의 없이만인 대학평의원회 총장선출제 최종 투표반영비율

교수 : 75% / 직원 : 10% / 학생 : 7.5% / 동문 : 7.5%

제51대 경희대학교 서울·국제 캠퍼스 총학생회
제34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학생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된
총장선출제 투표반영비율을 주도한 교수의회를 규탄한다

2019.4.30.
제51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법인·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한상 위원장

강석현 기자 nuajbes99@khu.ac.kr

지난 3일 부총장단은 “구성원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법인 이사회 논의 결과를 전했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한상 위원장은 “법인과 대학본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법인 이사회 결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대동제, 개교 70주년 기념식 등 많은 행사가 예정된 주간에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니 법인 이사회가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인이 구성원과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 안건 공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일 법인 이사회만 해도 서울캠퍼스 공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공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아무런 통보 없이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선출규정안(규정안) 논란’과 관련해 교수의회와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 등을 비롯한 구성원 단체는 “법인이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위원장 또한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5개월 여 지속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대평의냐,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냐에 대해 구성원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법인과 대학본부가 구성원 갈등 중재 역할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구성원 대표는 임기로 인해 중간에 교체되는 반면, 법인과 대학본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월권이 아닌 선에서 구성원 간 이견을 조율하고 화합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인과 대학본부의 역할을 말했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대평의 규정안이 나온 직후 소식지를 통해 “교수 65%, 직원 15%, 학생 10%, 동문 10%의 조정된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제안했으나 조율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대학(원)생 총학생회 대표들은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다”며 “대평의는 파행으로 결정된 규정안 제출을 보류하고 재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새로 구성된 대평의가 대평의 규정안 논의를 시작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난해 총장 선출제를 큰 틀에서 마련하여 합의했지만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3월 법인이 제시한 규정 초안에서 지적된 여러 독소 조항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다. 한 위원장은 “범대위 합의는 존중하되, 세부적으로 총장 선출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대평의 규정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추가적인 구성원 논의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는 등 ‘대평의 규정안 논란’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경희의 ‘민주화’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에 의한 총장 직선제 지향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총장 선출제 논의는 과도기에 있다”며 “대다수 구성원이 교수의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교수의회가 현재의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지난 1일 대학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적 표결 절차를 거쳐 마련된 대평의 규정안을 두고 교수의회가 일방적으로 이를 통과시켰다고 하는 오해가 불거진 현 상황에 몹시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대평의 규정안을 투표하는 과정은 분명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예컨대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출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대평의 규정안을 위한 투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대평의가 경희 전 구성원들이 대평의 평의원과 의석 수 등을 투표로 정하는 구조여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이사회가 제시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교수의회의 입장이 변화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평의 소속 네 구성원 단체 중 한 단체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교수의회가 주장하는 것이 교수가 대학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번 갈등을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경희의 다음 세대 구성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총장 선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대승적 차원에서의 구성원 합의를 위해선 법인과 대학본부의 적극적 역할과 교수의회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